

시민사회운동,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0 대응을 중심으로

김태근 _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집권 9개월,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고 진행 중에 있다. 식탁의 안전과 검역주권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촛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00만의 촛불이 되어 타올랐다. 촛불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진보진영의 화두가 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집단에 따라 개인적 지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평가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성찰은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포럼이나 이후 진행된 연대회의의 시민운동가 대회에서도 촛불은 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어 끊임없는 논쟁과 성찰의 계기로 한국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찾아든 촛불을 기회로 본인들의 집권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고,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사회진영(노동운동진영을 포함한)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죄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촛불에 대한 성찰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과 이를 위한 국민적 연대기구 구성 등의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과제가 부각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인다.

현재 시민사회운동진영과 민중진영 그리고 촛불카페로 대표되는 네티즌 간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한 국민적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안별 연대체였던 광우병 대책위원회를 뛰어 넘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시기를 관통하는 연대기구의 구성이 진행 중에 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준비위원회의 발족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기구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대기구 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논란, 즉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의 참여문제나 국민적 연대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쟁점 논의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촛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보이는 촛불에 대한 성격규정과 성찰이 2008년 한국사회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주제어임이 더욱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2008년 촛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기에는 개인적 역량의 부족으로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간 지역에서 ‘비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활동해 온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로서 개인적으로 이번 촛불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의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고자 한다.

2. 촛불에 대한 개인적 소회

영향의 정치를 통한 개입을 통해 한국사회의 민주적 진전을 일구어 온 90년대의 시민운동은, 21세기는 NGO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부푼 꿈속에 21세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연대활동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평가가 존재한다. 그 중 중요한 지점 하나는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를 지

배한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의 결과로서의 사회양극화의 심화'라는 변화된 지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지점이 바로 성장연합에 기반한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실질적 힘, 즉 풀뿌리에 기반한 건강한 지역시민사회의 기반 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2007년 4월, 울산지역에서 10여 년간 활동해 오던 울산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켰다.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라는 다소 긴 이름의 통합 조직을 출범시키며 가졌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시민운동이 정면으로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이며, 또 하나는 지역의 풀뿌리운동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강화에 노력해 보자라는 취지였다.

통합의 과정에서, 나는 회원과 후원회원을 명확히 구별하고 회원들에게는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교육 이수와 활동 참여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간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 다수의 보편적 이해를 반영하는 활동에서 양극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과 연대활동의 진행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나 탈퇴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나의 주장은 다수에 의해 채택되지 못했다. 현재 구성원(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진행과 그 속에서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현실론이 통합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이 되었다.

1년 6개월의 경과 속에서 통합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한 진전과 성과는 존재하겠지만 10여 년간 활동과정에서 굳어진 상근활동가 중심, 기자회견이나 캠페인 등의 현안 대응 중심의 활동패턴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중심·풀뿌리중심의 사고와 가치지향(양극화의 해소와 공공성의 강화)의 의제발굴과 사업진행이 말처

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촛불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언급하지도 않은 채 단체의 통합 과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촛불로 대표되었던 흐름에 대한 평가와 그 속에서 얻어진 교훈을 기존 조직활동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라는 전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대중들의 역동적 흐름으로 평가되는 촛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나 과제로 생각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를 촛불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광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당초 식탁의 안전문제나 검역주권 등의 문제로 촛불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촛불의 진화과정에서 다양한 주제가 촛불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반대와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중심, 토목중심의 국가개발정책에 대한 반대, 공기업 민영화로 대표되는 재벌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와 MBC PD수첩을 비롯한 공영방송 언론장악에 대한 반대 등의 내용으로 의제의 확장을 꾀한다.

그러나 정작 97년 이후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전체 고용노동자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870만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문제는 촛불 속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물론 이후 기륭전자나 이랜드, KTX 여승무원 등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촛불 속에 담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지만 비정규직의 문제가 다른 의제들처럼 온전히 촛불 속에 녹아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87년 체제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장 속에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했던 지점에 대한 반성은 2000년 이후 지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노조운동이나 시민사회의 대응이 현안 대응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던 상황의 연장 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일상적 연대의 실현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의 실패의 결과가 촛불에 비정규직 문제가 온전히 녹아지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에 대한 문제이다. 시민들의 광우병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제대로 해결해 줄 정치적 대표체의 부재가 다수의 국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이유 중 하나이다. 100만의 염원으로 만개했던 촛불이었으나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해 줄 정치적 대표체의 부재가 또한 촛불의 피로감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이다. 정치적 대표체의 부재가 촛불의 시작과 잦아듦의 근거 중 하나인 것이다.

7월 말 치뤄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실패는 촛불의 연착륙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정치적 대안의 부재 문제 역시 우리에게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시각은 ‘필요는 하지만 내 일로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러운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감시비판운동을 주요한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조의 요청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연대운동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 대표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란 전제하에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고유한 임무라는 생각으로, 정치조직이나 정당조직 등과의 관계는 등거리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기능적 분리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과 이에 근거한 사업이 9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중요한 활동방식이었다.

어떤 운동이든 운동이 시대의 흐름과 조응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면 2008년 현실의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는 개혁적 또는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개별단체들의 현실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조금 더 논의를 연장해서 보면 90년대 시민사회진영의 주요한 화두였던 투명성·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과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정당이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정한 지역에 기반한 보스를 중심으로 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구조를 가진 것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 속에서 시민단체 성장의 기반이 된 측면 또한 강하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통한 직접적 선거개입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을 때 시민단체는 정치적 활동의 전면화라는 주제로 대응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부패·반국가사범 등’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라는 방식의 대응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간 측면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나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개입은 2000년 총선연대 이후 정책의제 제안운동이나, 개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진출(정치조직과는 거리를 둔), 그리고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권 진출 등의 형태로 개별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선거공간에서의 활동은 개별 단체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싶지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그래서 적당히(?) 단체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정도’의 활동 공간으로 축소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그간의 다양한 선거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명박 정부하의 시민운동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촛불에 대한 탄압을 넘어, 집시법 개정,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중부세 완화를 필두로 한 부자중심의 감세정책의 실시 등 소위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중심,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실현과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보다는 배제’를 노골화시키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87년 이후 20년간 한국사회가 이루어 온 민주주의의 성과를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비롯이라도 하듯이 위임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촛불 속에서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100만의 촛불도 합법적으로 등장한 정부를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국민적 여론은 무시한 채, 소위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와 보수언론 그리고 재벌들의 생각과 의사를 반영한 정책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합리적 정책 대안의 마련과 이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시민운동진영의 고민이었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합리적 비판세력’으로서의 시민운동진영이 설자리가 불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시민사회진영의 주요한 대응이 개별 정책의제에 대한 찬반 등의 대응활동이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정책이 시민사회진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어 개별 단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강요받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의 정책대안 제시와 언론을 통한 공론화와 정치적 쟁점의 부각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계기별 활동 등을 주요한 활동 수단으로 삼아왔던 기존의 시민사회운동패턴으로는 보혁구도의 조장을 통해 합리적 의견제시에 대해 철저하게 세력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구도 속에서 ‘합리적 견제세력’이라고 스스로 자리매김 하였던 시민단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 없이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설적 연대기구의 구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시민운동진영은 소위 민중운동진영과의 관계에 있어 사안별 연대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변화된 조건, 즉 위임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시적 사안별 연대체의 구성이 아닌 상설적 연대기구 구성 등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간 시민사회가 스스로 설정하였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기능적 분리의 토대 속에서 활동의 원칙으로 자리잡았던 ‘합리적 견제세력’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춰져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태도와 입장과 관련하여 상근 활동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회원들 간의 이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의 해결을 위한 단체 내의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비판감시운동의 전문화와 풀뿌리운동의 강화’라는 원칙의 강조만으로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기 별로 다가오는 선거공간에서의 개입방안(정책연대, 후보전술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시민운동 내외로부터 작동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방침 역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의 시민운동 역시 동일한 고민 지점에 서 있다. 지역토호를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세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의제에 있어서는 일부 시민사회와 노동진영 그리고 진보정당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보낼 뿐 지역의 언론 등은 지역의 성장연합세력의 일환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체계의 구축 등의 과제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당분간 그 실현 가능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시민참여의 제도화나 일상적인 권력감시 등의 지방 자치 진전의 성과는 존재하나, 지역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은 ‘좋은 얘기’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행정의 하위파트너로 취급되거나 변방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풀뿌리 차원의

토대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적 토대형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차원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4. 2010 무엇을 할 것인가?

(1) 객관적인 상황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정책실행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지속과 부자 중심의 정책집행 등에 대한 사회적 불만 등으로 현재 20%대에 머무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 진행될 2010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반한나라당 연대의 지역 내에서의 실현의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개발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병존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2010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지역 내에서 반한나라당(반성장연합)을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전선의 구축문제가 지방선거에서의 대응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반한나라당보다는 반성장연합에 기반한 선거구도의 정착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2010선거와 관련한 대응의 문제는 단체의 활동의 연장 속에서의 파악보다는 이명박 보수정권의 집권과 민주주의의 유린에 맞선 새로운 대안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선거과정과 이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때 개별 집단(진보정당, 시민사회, 민중진영 등)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접근이 가능

할 것이다.

(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선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관련 대응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혁구도 속에서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진보세력으로 취급하고 있고 시민들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스스로는 중립적 위치의 합리적 집단이라고 자임하는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리의 정치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인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인 선거공간을 애매한 태도로 방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기초하여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후보전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처럼 개인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대응과 단체차원의 대응(정책연대를 통한 진보정당 등과의 공동의 대응 등) 두 가지 방식 모두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비판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자연스러운 시민운동의 흐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의 울타리 안에서 그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던 임원들에 대한 정당운동의 제한 규정을 풀고, 선거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권자의 노력을 촉구하는 활동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 언론사들의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보수언론들을 보며 차라리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왔던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역시 이

제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5. 나가며

2010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여전히 고민스러운 주제다. 현안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와 시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이루어 낼 구조(언론)를 갖추고 있지 못한 조건, 그리고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활동의 정체성(비판 감시자)을 뛰어넘는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 등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2010년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진출 등에는 상당히 너그러운데, 총선 등과 관련한 대응 등에서는 곤란(?)하다는 단서가 붙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적극적인 정책연대의 실현 또는 후보 진출은 단순히 지방선거에서만 가능한 사안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인 듯 하다.

운동이 시대와 조응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변화된 상황, 이명박 정부하의 시민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의제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중요한 공간인 선거과정에 시민운동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생각이다.

김태근(Kim Tae-gun) tkkim36@hanmail.net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